호남 경선 앞두고…반전의 계기 마련 '마지막 승부수'

이낙연 의원직 사퇴 카드 왜?

절박한 심정…호남민심 지지 호소
전략적 판단 늦어…효과는 미지수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것은 호남 민심에 절박한 심정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지역 경선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충격의 일격을 당한 이 전 대표로선 호남 색채가 짙은 1차 선거인단 표심 공략과 함께 추석 이후 치러지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지역 경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대세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역전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대구·경북지역과 강원지역 경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승부수가 필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전 대표는 이날 "지금 상황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남 영광의 시골뜨기 소년, 광주의 하숙집 할머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거론하는 등 지역 주자임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덕성 논란을 겨냥, "우리는 5·18 영령 앞에, 세월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놔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승부수가 경선 구도와 호남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에 대해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당장,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서가 현실적으로 수리되기 어려운 정치적 성격이 강한데다 정치 1번지인 종로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선이 이미 시작됐고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부상한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 카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원직 사퇴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반등 이후 정체 국면이 나타난 지난 7월 말에나 진정성을 담보하는 카드로 승부를 걸어야 했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공방 중단 선언과 같이 전략적 판단이 늦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카드가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결집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선 판을 뒤집기에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호남지역 경선 이후를 겨냥한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정치권은 '이해는 되지만 당혹스러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며 "호남 민심이 과연 이 전 대표의 절박함에 공감하며 결집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는 인공지능 수도로, 전남은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 만들겠다"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수도로, 전남은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인공지능 개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가전 특화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장을 통한 광주 제조업 미래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반 문화, 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 예술 콘텐츠 산업 자원과 문화, 예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빛그린산단 미래 전기차 산업 메카로 발전, 광주형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 지원 등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전남은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만들어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면서 전남의 발전 전략도 발표했다.

그는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기업으로 키워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로 성장시키고, 한전공대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인재육성과 관련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호남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 300달성을 지원하고 그린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호남이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전남을 국가 드론사업 중심으로 키우겠다"면서 "전남을 중심으로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해 나주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확 오른 민주 경선 TK 투표율…대세론 굳히기냐 선두 견제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 투표 열기가 뜨겁다.

8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TK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첫날인 7일 투표율은 51.6%로 집계됐다. 앞서 첫 순회경선지 대전·충남이 이틀을 통틀어 37.3%, 그 다음인 세종·충북이 41.9%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높아진 수치다.

민주당의 '험지' TK는 11개 경선 권역 중 제주 다음으로 권리당원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경선 흥행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 '1차 슈퍼위크' 당일까지 64만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11일 개표되는 TK 지역 민심의 향배는 경선판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그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충청권 과반 득표에 이어 '고향' 대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후발 주자 사이에서는 이 지사의 경선 초반전 과반 득표가 위기감을 자극, 진영별 '조직표'가 결집한 결과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자들은 SNS에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 전파에 힘쓰는 등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는 '영끌' 전략을 가동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누락된 사업 예산 챙겨라"

광주시·전남도, 국회 예산심의 심의 총력전
고자기장硏·해저터널 등 미반영 사업비 확보 집중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신규 사업 반영과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국고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지역국회의원과 공조하는 것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예산 협의회를 갖기로 하는 등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3일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3조 1457억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시는 특히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80억원)을 비롯한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원), RE 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원) 예산 등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15일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국민의힘 측과 호남권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0월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수시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예산 간담회를 이어가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27일부터 12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국회에 자체 상황실을 마련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여야 상황을 살피며 상임위,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고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1205건, 사업비 7조5131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지난해 7조1782억원보다 3300억원이 늘어난 규모지만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빠지거나 요구액보다 낮게 반영돼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은 10가지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부에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총사업비 6312억원 중 5억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총사업비 3433억원 중 5억원) 등 3개 사업, 농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900억원 중 40억원) 등 2개 사업, 해수부 사업에선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건설 사업(5940억원 중 45억원)이다. 중기부 사업 중에선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사업(400억원 중 8억원), 산림청 소관 사업 중에선 순천만 브릿지 가든 조성사업(310억원 중 100억원)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